

호남 당심이 좌우…여야 당권주자들 앞다퉈 구애 발길

민주·평화당 전대 앞두고… 이해찬·최재성 광주·전남 방문
정동영·유성엽 등 지지 호소…최경환 광주서 토크콘서트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야 당대표·최고위원 출마자들이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잇따라 광주·전남을 찾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 여·야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호남 구애에 나서고 있는 것은 호남 당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호남의 선택'이 곧 전당대회 승리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풀이된다. 특히, 오는 8월 4일 광주시 당과 전남도당 위원장을 선임하는 개편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호남행이 더욱 잦은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시·도당 개편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당권 출마자들의 호남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당 대표에 출마한 이해찬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광주를 찾아 지역 위원장들과 면담을 가졌다. 지난 6·13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다시 입성한 뒤 당 대표 출마 표를 던진 최재성 의원도 지난 22일 영광을 찾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핵심 당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보냈다. 이어 광주

에서 일부 지역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도 호남행도 이어지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지난 22일 장성을 찾아 지방의회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지지를 호소한데 이어 2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시의회 의장, 상임위원회와 면담을 하고 항우회 행사에도 참석한다.

앞서 박정 의원도 지난 21일 영암·무안·신안, 나주·화순지역 대의원 대회에 잇따라 참석해 표밭을 다졌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오는 8월 4일 광주김대중센터와 담양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열리는 시·도당 개편대회에 대거 참석해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들면서 광주·전남지역의 친문계 정치권 인사들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노·친문계 좌장격인 이해찬 의원이 뒤늦게 당 대표에 출마함에 따라 이들의 선별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 인사들

노회찬 비보에…교섭단체 지위 잃은 '평화와 정의' 의원수 19명으로 줄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23일 갑작스런 사망으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함께 구성한 국회 내 원내교섭단체 '평화와정의의원모임(평화와정의)'은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잃게 됐다. 소속 의원 수가 19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회법이 규정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명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애초 평화와정의는 지난 3월 공동교섭단체를 논의하면서 정의당 6명과 평화당 14명 등 20명으로 출범했다. 비교교섭단체

로만 활동해 왔던 정의당으로서는 장당 아래 처음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얻었던 셈이다.

평화와정의는 추후 평화당이나 정의당에 추가 입당하는 국회의원이 생기거나 '평화와정의'에 참여하려 하는 무소속 의원이 생기지 않는 한 당분간 교섭단체 지위를 얻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정의당 뿐 아니라 평화당도 한 명의 의원을 영입하기 위해 당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호남의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을 대상으로 한 평화당의 러브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두 의원은 민주당으로의 입당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평화당의 영입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바른미래당에 있는 평화당 성향의 비례대표 의원 3인방에 대한 제명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른미래당이 요지부동이어서 성사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이용섭 시장 조용한 모친상

서울 장례식장 조출한 장례

지난 22일 오후 늦게 모친 사망 소식을 접한 이용섭 광주시장이 가족·친척만 참석하는 '조용한 장례'를 결정, 주위에 알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의 모친 정종임씨가 22일 오후 6시 40분께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이 시장은 시청 행사 도중 동생으로부터 모친의 사망

소식을 들자 모든 공식 일정을 미루고 상

경하며 시 대변인실을 통해 "민소·발인 일자, 장지 등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말고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마라"고 전했다.

이 같은 지시로 인해 서울에 마련된 장례식장은 광역단체장의 모친상이라고는 보기 어렵게 가족, 고향 지인 등만이 자리를 지켰다.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으며, 부의금도 받지 않았다.

이 시장은 또 23일 오전에 예정됐다가

취소된 문화경제부시장 임명 브리핑을 24일 밤인 다음날인 25일 오전 갖기로 했다.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이 시장이 26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휴가를 냈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안다"며 "휴가 기간 시정 현안에 대한 처리 방침, 민선 7기 광주시의 전략 등을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표정 굳은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의 'SNS 생방송입니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란 청원에 답변할 예정이었으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에 일정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야권 입각 '협치 내각' 추진

靑 "야권 인사 발탁 검토"...이개호 유력 농림 장관 주증 인선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에서 야권 인사를 내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야권과 협치에 나서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

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인선을 이번 주 발표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이 협치 콘셉트로 개각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는 이개호 의원(영광·장성·함평·담양)이 유력한 상황이다. 임명이 시급한 농림부 장관은 먼저 인선을 하지만, 후속 개각에서는 야권 인사 발탁을 계속 검토한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2기의 성과를 가

를 민생·경제·행정기와 사회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속에 장관 후보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

통을 거듭하거나,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해 예산이나 입법이 제자리 걸음한다면 국정운영의 동력이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민생·경제의 경우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사회 갈

등이 격化되고 여권에서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개혁 입법 주

진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기무사

령부의 '계엄령 검토·문건' 파동 등으로 권

력기관이나 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다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

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줄줄이 대기

하고 있는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는 야권과의 협치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

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

에서도, 문 대통령은 항상 '초당적 협력'

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이 2기 정부 인선을 앞두고 '협

치' 카드를 고려하는 것은 이런 여소야대

국회라는 현실을 극복하고 소모적 정쟁을

최소화해 핵심적인 국정과제 수행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어느 범위까지 손을 내밀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야권도 입각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협치의 범위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이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이후로도 권력기관 개혁 및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한국당과의 협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협치가 결국 정치권의 정계개편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협치가 결국

는 야권과의 협치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항상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이 2기 정부 인선을 앞두고 '협

치' 카드를 고려하는 것은 이런 여소야대

국회라는 현실을 극복하고 소모적 정쟁을

최소화해 핵심적인 국정과제 수행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어느 범위까지 손을 내밀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야권도 입각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협치의 범위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이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이후로도 권력기

관 개혁 및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겠다는

방침인 만큼, 한국당과의 협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협치가 결국

정치권의 정계개편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협치가 결국

는 야권과의 협치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

에서도, 문 대통령은 항상 '초당적 협력'

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이 2기 정부 인선을 앞두고 '협

치' 카드를 고려하는 것은 이런 여소야대

국회라는 현실을 극복하고 소모적 정쟁을

최소화해 핵심적인 국정과제 수행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어느 범위까지 손을 내밀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야권도 입각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협치의 범위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이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이후로도 권력기

관 개혁 및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겠다는

방침인 만큼, 한국당과의 협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협치가 결국

정치권의 정계개편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협치가 결국

는 야권과의 협치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

에서도, 문 대통령은 항상 '초당적 협력'

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이 2기 정부 인선을 앞두고 '협

치' 카드를 고려하는 것은 이런 여소야대

국회라는 현실을 극복하고 소모적 정쟁을

최소화해 핵심적인 국정과제 수행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어느 범위까지 손을 내밀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야권도 입각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협치의 범위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이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이후로도 권력기

관 개혁 및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겠다는

방침인 만큼, 한국당과의 협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협치가 결국

정치권의 정계개편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협치가 결국

는 야권과의 협치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